

2022 대입제도 개편방안

2022 대입제도 공론화, 무엇을 논의해야 하는가?

2018.5

좋은교사운동

2022 대입제도 공론화, 무엇을 논의해야 하는가?

전체 핵심 요약

1. 현재의 수능 시험의 방식이나 내신 제도를 그대로 두고 당면한 수시-정시 비율이나 수시 정시 통합 문제 등을 결정하는 것은 모두에게 만족스럽지 않고 임시방편에 불과하다.
2. 현 대입 제도가 다루어야 할 쟁점은 공정성 문제, 배움의 질 문제, 과잉 경쟁의 문제, 학생부 기록의 문제다.
3. 공정성의 측면에서 볼 때 학종에 대해 금수저 전형이라는 비판이 있었으나 실제로 전형별 합격생 현황을 분석하면 수능 전형이 상대적으로 고소득층, 수도권, 강남, 자사고/특목고 학생들에게 더 유리한 전형으로 확인된다. 고로 학종이 금수저 전형이라면 수능은 다이아몬드 전형이다.
4. 대입전형의 가치는 전형에 따른 배움의 질의 측면에서 평가되어야 한다. 학종의 도입으로 인해 평가의 타당성 제고와 학교 교육의 변화라는 장점이 나타나고 있고, 대학도 적격자 선발에 유익하다.
5. 상대평가 체제 속에서 과잉변별에 의한 과잉경쟁의 부작용이 나타나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수능과 내신 동시 절대평가가 필요하다. 당분간 상대평가 체제 하에서도 1등급을 10~20%로 늘릴 필요가 있다.
6. 학생부 기록과 관련하여 과열, 과장, 업무 과중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으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학생부 기록 개선이 필요하다. 교과 기록을 세분화 간소화함으로써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친절한 성적표' 체제를 도입하여야 한다.
7. 종합적으로 대입제도가 지향해야 할 가치는 배움의 질 향상, 과잉 경쟁의 지양, 학교교육의 내실화, 사회적 공정성 제고, 적격자 선발을 위한 대학의

자율성 존중이 되어야 한다.

8. 대입제도 개선 방향은 1) 수능의 질 개선을 위한 논술형 수능 도입 2) 과잉경쟁 완화를 위한 수능 내신 동시 절대평가 3) 수능과 학생부 정성평가를 결합한 수능종합전형의 도입 4) 내신 교사별 평가 도입과 수행평가 위주의 상시평가 체제 5) 고교 서열 체제 개편 6) 기회균형선발 확대가 되어야 한다.

9. 8월까지 결론을 내려야 하는 2022대입제도에 대해서는 현상 유지 기조 하에 부분적 개선을 하도록 한다. 수학을 절대평가화하고, 등급의 범위를 넓혀야 한다. 수능최저등급을 완화하고 EBS연계는 폐지하여야 한다.

10. 향후 공론화 과정은 의제를 새롭게 제대로 설정을 하고, 충분한 시간을 두고 질 높은 의사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하고, 교육 3주체인 학생 학부모 교사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11. 결론적으로 이제 우리는 세밀한 줄세우기를 위한 변별력 위주의 과거 패러다임을 채택할 것인지 배움의 질을 높이고 과잉경쟁을 완화하는 미래 패러다임을 채택할 것인지 선택을 해야 한다.

1. 서론

○ 딜레마

지금 우리는 딜레마에 빠져 있다. 수능은 절차적 공정성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오지선다형 EBS 문제집 풀이식의 공부가 미래 역량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결정적 한계 또한 분명하다. 그런데도 정시 확대에 대한 여론이 적지 않으며 반면 교사들 다수는 수능을 강화하는 것이 퇴행적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¹⁾ 이 가운데서 교육부는 수능 중심의 정시 전형과 학생부 중심의 수시 전형의 황금 비율을 찾아낼 것을 국가교육회의에 요청했고, 국가교육회의는 이를 공론화를 통해 해결하겠다고 한다. 공론화는 결국 일반 국

1) 강기수(2017). 학생부위주전형에 대한 고등학교 교사의 인식 분석. 국회의원 김세연·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학생부전형의 성과와 고교현장의 변화 심포지엄. 고교교사 401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대입전형의 고교교육정상화 기여 정도에 대해 학생부종합전형이 4.1로 가장 높고, 학생부교과전형 3.8, 수능위주전형이 3.1로 나타나고 있다. 대입전형의 바람직한 정도에 있어서도 학생부종합전형이 4.2, 학생부교과전형이 3.2, 수능위주전형이 2.7로 나타나고 있다.

민들에게 문제를 풀라는 것인데, 애초에 이 문제의 정답은 있는 것일까?

교육부는 수능의 선발시기와 평가방법을 결합한 모형으로 수능처럼 오지선다형 문제를 출제했다.²⁾ 그 안에 정답이 있을까?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가만히 들여다보면 수시와 정시를 통합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선택의 문제가 있고, 수능을 절대평가로 할 것인가 말 것인가의 선택의 문제가 섞여 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필요한 중요한 단서들이 빠져 있다. 문제지를 뒤로 넘기다보면 수능을 논술형으로 할 것인지, 내신을 절대평가로 할 것인지를 문제에 대해서는 중장기 과제로 서술하고 있다. 대체로 중장기라고 하면 언제 할지를 모른다는 이야기다. 통상 안 하겠다는 뜻을 이렇게 표현한다.

풀이하면 앞으로 수능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내신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2022년부터 3년 동안 적용될 대입제도를 일단 결정하고 나서 그 다음에 2025년부터 적용될 대입제도에 대해서는 그 때 가서 또 생각해보자는 것이다. 마치 집을 지으면서 몇 층까지 올릴 것인지 결정하지 않고 일단 급하니 1층부터 짓고 보자는 것이다. 나중에 기초 공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새로 땅을 파야 하는 상황이다.

수시와 정시의 비율, 수시와 정시의 통합, 수능 절대평가의 문제 등은 기본적으로 선결되어야 할 전제가 있다. 수능의 질과 내신에 대한 종합적인 그림이 있어야 퍼즐이 맞추어진다. 이러한 그림이 없다면 정답도 있을 수 없다. 교육부가 낸 오지선다형 문제에 해답은 없다. 해답은 보기 바깥에 있다. 현재의 조건으로는 답이 없으니 문제를 새롭게 정의하여야 한다.

먼저 분명해져야 할 것을 분명히 하지 않은 채 논의되는 현재의 대입제도 개편안은 필연적으로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고 결정된다 하더라도 또 다시 고쳐야 할 운명을 겪게 될 것이다. 대입제도는 늘 국민적 관심사였지만 이번만큼 뜨겁게 사회적 논란이 된 적이 별로 없고, 최초로 속의 민주주의를 통한 사회적 합의를 만드는 시도라는 점에서 특별한 의의가 있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치고 얻는 결과가 고작 3년만 유효할지 모르는 대입제도, 그것도 핵심이 아닌 임시방편을 결정하는 정도라면 실망스럽다.

2) 수시 정시를 통합하는 전제하에 수능 절대평가와 수능 상대평가와 원점수 제공이라는 3가지 모형과 수시 정시 분리라는 전제 하에 수능 절대평가와 상대평가라는 2가지 모형을 제시하고 있다.

이번에 국민적 공론화를 통해서 결정해야 할 문제는 단기 방편이 아니라 미래를 내다 보는 결정이 되어야 한다. 교육부 이송안에서 2025 이후 중장기 과제로 분류한 것에 대한 논의가 핵심이다. 그 방향이 명확해질 때 2022 대입제도 개편에 대한 방향성도 발견될 수 있을 것이다.

2. 주요 쟁점의 이해

○ 수능 절대평가의 함의

최근 대입 논쟁은 수능 절대평가에서 촉발되었다. 문재인 정부의 교육공약으로 수능 절대평가가 제시되었고, 박근혜 정부에서 결정하지 못한 2021 대입 방향 발표를 앞두고 수능 절대평가에 대한 논쟁이 뜨겁게 타올랐다.³⁾ 결국 2017년 8월 교육부는 수능 절대평가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1년 유예를 결정하게 되었다. 수능 절대평가가 왜 그렇게 문제가 되었나?

수능을 절대평가로 하면 수능 점수로만 선발하는 전형에서 변별력 문제가 제기된다.⁴⁾ 그렇게 되면 수능 전형을 줄이는 결과로 나타날 수 있다. 이에 수능 전형을 선호하는 쪽에서 반발하면서 정시 확대⁵⁾를 주장하는 한편 학생부종합전형⁶⁾에 대한 공격을 하게 되었다.

3) 이 논의의 기원은 201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3년 대입제도 간소화를 위주로 하는 대입제도 개편 방안이 발표되면서 문이과 통합에 대한 아이디어가 호응을 얻었다. 이에 2015 교육과정 개정에 통합 과목 아이디어가 반영되었고, 이를 반영한 2021 수능 과목에 대한 결정을 하는 흐름 가운데서 대선을 전후하여 수능 절대평가가 강력하게 대두하였다.

4) 절대평가라는 용어가 사실상 등급제와 혼용되는 측면이 있다. 점수를 그대로 쓰는 것도 절대평가일 수 있으나 현재 쓰이는 용법은 예컨대 90점 이상을 1등급으로 간주하자는 의미로 쓰인다. 현재 상대평가는 4%이내를 1등급으로 간주하고 있어 전체의 성적 분포에 따라 등급이 결정된다. 그런데 문제는 수능 100% 전형에서는 등급이 아닌 표준점수를 쓰고 있는데 평균과 표준편차 등을 반영하여 소수점 아래로 세밀한 변별이 가능하다. 등급제로 할 경우에도 큰 범위의 변별은 가능하지만 같은 등급의 숫자가 많아지는 문제가 있다. 이 경우 수능에 내신 점수나 면접을 결합하면 변별이 가능하지만 현재는 수능점수로만 100% 반영하는 비율이 높아서 문제가 된다.

5) 정시 모집이 수능 전형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논술 전형, 실기 전형도 있지만 대부분 수능 전형이고, 수능+면접 전형인 경우는 사범계열과 신학대를 제외하면 거의 없으므로 사실상 수능 100% 전형을 확대하라는 의미다.

6) 수시 모집에는 학생부교과전형과 학생부종합전형이 있다. 학생부교과전형은 내신 성적을 정량적으로 반영하는 전형이고, 학생부종합전형은 내신 성적을 포함하되 다양한 측면에 대한 정성적 평가를 포괄적으로 반영하여 선발하는 전형이다.

학생부종합전형(이하 학종)에 대한 공격은 그것이 소위 금수저 전형이자 감감이 전형이라는 말로 요약된다. 학교의 교사와 대학의 입학사정관의 주관적 평가에 의존하는 평가이고, 이 과정에서 금수저에게 유리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이에 비해 수능 시험은 공정하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반대로 오히려 수능 전형이 강남이나 특목고 학생에게 더 유리하다는 비판이 존재한다. 이 대목에서 공정성에 대한 논쟁이 발생한다. 잠시 후 자세히 살펴보자.

이 문제의 핵심에는 정성평가에 대한 관점의 차이가 있다. 학생을 평가함에 있어 수능 시험과 같은 객관적 정량 평가가 신뢰롭다는 입장과 시험 점수 외에도 학생의 다양한 측면에 대한 교사의 관찰과 대학의 해석으로 이루어지는 정성평가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의 차이이다.

평가의 방법을 둘러싼 논쟁이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학교 교육의 질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객관식 시험 문제 위주의 평가 방식이 학생들의 배움의 질을 저하시키기 때문에 미래 역량을 기르기 위해서는 객관식 시험을 벗어나서 다양한 질적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학종의 비중이 커짐에 따라 수업에서도 바람직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고, 과거에는 입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버림받았던 동아리 활동과 같은 비교과 영역의 활동도 새롭게 주목을 받고 있다. 그것은 혁신학교의 입시 성과로도 연결이 되면서 학교 교육의 혁신과 맞물리게 되었다. 그런데 수능 중심으로 입시가 돌아가게 되면 이와 같은 학교의 변화는 도루묵이 될 것이라는 것이다.

절대평가 논쟁의 또 다른 핵심에는 과잉 경쟁의 완화라는 과제가 있다. 우리나라 학생의 학습시간이 과로사 기준인 주당 60시간을 넘어 평균 70시간(일반고)~80시간(특목고)을 넘는다는 사실이 자리 잡고 있다. 상대적 변별을 하기 위해 과도하게 어렵거나 치졸한 문제를 내게 되고 이것이 충분히 우수한 학생들에게 끝없는 과잉 경쟁을 유발하는 원인으로 지적된다. 그런 문제까지 풀기 위해서 과도한 시간을 투입해야 하고, 그것이 살인적 경쟁을 불러일으킨다. 더 큰 문제는 그것이 상위권 학생들에게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라 상위권 학생들의 이와 같은 경쟁으로 인해 중하위권 학생들이 좌절감을 느끼고 학습을 포기하고 소외되는 현상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수준 이상의 학생들은 충분하다고 인정하고 동급으로 취급하는 절대평가가 필요

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절대평가를 하게 되면 변별력 문제가 다시 등장하면서 결국 변별력을 위해서는 상대평가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립되게 된다.

이처럼 표면적으로는 수능 점수 산출 방식에 대한 단순하게 보이는 문제가 함의하고 있는 의미는 적지 않다.

○ 학생부 기록의 문제

수시 모집의 비율이 늘어나면서 학생부의 기록이 입시에 중요해졌다. 이로 인해 몇 가지 문제가 대두하게 되었다. 과열과 과장의 문제다. 교과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이 중요해졌다. 교과뿐 아니라 비교과적 활동도 중요해졌다. 이제는 시험 준비 외에도 챙겨야 할 것들이 많아졌다. 자율동아리도 하고, 봉사활동도 하고, 소논문도 쓰고, 각종 대회도 준비해야 한다. 학부모나 사교육의 영향력이 개입되기도 한다. 한편 교사 입장에서는 학생에 대한 기록의 부분에서 입시를 보다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때로는 과장이 들어가기도 한다. 교사가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도 기록을 요구받는 경우가 있다. 교사의 학생부 기록 업무가 과거보다 훨씬 늘어난 한편 규정과 절차는 더욱 엄격해져 업무 부담이 되고 있다. 교사에 따른 편차가 크다는 지적도 있고, 학생부 기록을 이유로 학생을 억압하는 기제로 쓰이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또 대학 차원에서 학생부 기록에 대해 어떻게 해석하고 평가하는지에 대한 불신도 존재한다. 이로 인해 학생부에 무엇을 어떻게 기록해야 할 것인가를 둘러싸고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3. 공정성 문제

○ 공정성의 의미와 실제

우선 가장 논란이 되는 공정성 문제부터 살펴보자. 정시 확대를 주장하는 쪽은 수능이 공정하고 학종은 불공정하다고 주장한다.⁷⁾

7) 강원일보(2018.4.26.) 전국진학지도협의회 등 23개 교육단체는 25일 수시·정시 통합과 수능 절대평가 지지 입장을 발표했다. 수능전형 확대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한다며 정시 수능전형 확대 반대를 위한 국민청원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수능 확대를 요구해 온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은 이날 "공정한 정시 수능전형 비중을 최소 50% 이상 높여야 한다"고 반박했다. 또 "수능 최저학력기준이 폐지되면 수시 이월 인원 감소로 정시가 축소되고, 수시·학종은 그야말로 낱깜이·금수저 전형이자 불공정한 음서제로 변질될 것"이라며

공정성을 무엇이라고 정의할 것인가? 공정에 대해 복잡한 논의를 생략하고 대중이 이해하는 논법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즉 소위 금수저에게 더 유리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자신의 실력대로 경쟁하고 평가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수능은 공정한가? 모든 학생이 같은 날 똑같은 시험 문제로 시험을 치르고 채점 기준이 사람에 따라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공정의 조건을 갖추고 있는 듯 보인다. 그러나 범위를 넓혀보면 그것만으로 공정성을 논하기는 어렵다. 예를 들어 해비급과 플라이급이 같은 링에서 같은 글러브를 끼고 시합한다고 해서 공정한 게임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공정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형식적 공정. 또 하나는 실질적 공정이다. 똑 같은 룰로 경쟁하도록 하는 것이 형식적 공정이라면, 약자의 불리한 점을 고려하여 어드밴티지를 주는 것이 실질적 공정이다. 그런 점에서 금수저와 흙수저가 똑같은 시험 문제를 치른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공정한 게임이 된다고 하기 어렵다. 수능이라는 게임은 사교육 요인이 많은 영향을 주는 게임이다.⁸⁾ 시험장 바깥의 요인까지 고려하면 수능이 공정한다는 명제는 성립되기 어렵다. 다만 주관적 평가 요소를 배제한다는 점에서 객관성이 높을 뿐이다. 객관성과 공정성은 엄연히 다른 개념이다.

그렇다면 학종은 공정한가? 학종은 상대적으로 사교육 요인보다는 학교 수업에 충실한 학생에게 유리한 방식이다. 하지만 반드시 소득 요인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가정 분위기가 안정된 학생들이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수업에도 열심히 참여할 가능성은 높다. 또 학종에서도 여전히 중요한 내신 점수는 역시 사교육 개입 요인이 존재한다.

요컨대 수능이나 학종이나 금수저에게 유리하지 않은 전형이란 없다. 다만 상대적인 차이가 존재한다. 그 점에서 수능과 학종 전형 중에서 어떤 것이 보다 더 금수저에게 유리한가 하는 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것은 학종이 깜깜이 전형을 통해 결과적으로 금수저에게 더 유리한 전형이라는 가설의 사실 여부를 검증하는 것이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주요 54개 대학의 입학생을 대상으로 소득에 따른 국가장학금 수혜 비율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⁹⁾ 학종의 경우 45.3%이고, 수능의 경우

“교육부는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과 연계한 수능 최저학력기준 폐지 권고를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8) 송기석·한국교육행정학회(2016.9.21.)의 교육정책포럼 ‘대입제도의 문제점과 해법 탐색’에 포함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사교육을 유발하는 전형 요소에 대한 설문에 대해 논술(4.4), 수능성적(4.2), 내신성적(4.0), 비교과기록(3.6), 자소서와 교사추천서(3.6) 순으로 응답하고 있다.

9) 한국대학교육협의회(2017). 학생부전형의 성과와 고교 현장의 변화. 국회의원 김세연·한국대학교육협의회 심

35.2%였다. 약 10%의 차이가 난다.

[표1. 전형별 국가장학금 수혜 비율]

국가장학금 1유형	학생부 종합	학생부 교과	논술	수능	실기 (특기자 포함)	기타	전체
수혜	18,876	23,445	4,267	24,512	5,559	81	76,740
	(45.3%)	(48.8%)	(34.2%)	(35.2%)	(37.0%)	(11.8%)	(40.9%)
비수혜	22,838	24,574	8,205	45,199	9,471	604	110,891
	(54.7%)	(51.2%)	(65.8%)	(64.8%)	(63.0%)	(88.2%)	(59.1%)
전체	41,714	48,019	12,472	69,711	15,030	685	187,631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소득분포를 분석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기초생활수급자를 포함한 4분위 이하의 비율이 학종의 경우 31.3%이고 수능의 경우 23.1%로 8.2%p 차이가 나타났다. 수능 전형 합격생의 소득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표2. 전형별 소득 분위 분포]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학생부 종합	학생부 교과	논술	수능	실기 (특기자 포함)	기타	전체
기초생활 수급자	1,800	1,584	51	1,181	229	3	4,848
	(4.3%)	(3.3%)	(0.4%)	(1.7%)	(1.5%)	(0.4%)	(2.6%)
1분위	4,218	4,952	800	4,918	1,395	37	16,320
	(10.1%)	(10.3%)	(6.4%)	(7.1%)	(9.3%)	(5.4%)	(8.7%)
2분위	3,225	4,578	708	4,619	1,045	9	14,184
	(7.7%)	(9.5%)	(5.7%)	(6.6%)	(7.0%)	(1.3%)	(7.6%)
3분위	2,173	2,938	536	2,964	685	8	9,304
	(5.2%)	(6.1%)	(4.3%)	(4.3%)	(4.6%)	(1.2%)	(5.0%)
4분위	1,656	2,304	426	2,354	502	7	7,249
	(4.0%)	(4.8%)	(3.4%)	(3.4%)	(3.3%)	(1.0%)	(3.9%)
5분위 이상	28,642	31,663	9,951	53,675	11,174	621	135,726
	(68.7%)	(66.0%)	(79.8%)	(77.0%)	(74.5%)	(90.6%)	(72.0%)
전 체	41,714	48,019	12,472	69,711	15,030	685	187,631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학종 전형 합격생 중에는 기회균형 전형이 포함되어 있다고 반론할 수 있다. 하지만 기회균형전형에 해당하는 비율은 크지 않아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¹⁰⁾

이 외에 또 하나 비교할 수 있는 지표가 있다. 자사고와 특목고 학생들이 어떤 전형을 통해 더 많이 합격하는지를 비교해 볼 수 있다. 자사고와 특목고 학생들이 모두 고소득층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사교육을 많이 받았음은 분명하게 나타난다.¹¹⁾ 아래의 자료를 보면 수능전형을 통해서는 자울고/특목고 합격 비율이 23.8%인 반면 학종의 경우 18.7%로 나타나고 있어 수능 전형이 자울고/특목고에 상대적으로 유리한 전형으로 나타나고 있다.

10) 2019년 전형에서 고른기회전형 선발인원을 분석한 결과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이화여대, 중앙대, 경희대를 모두 합한 결과 전체 모집인원의 2.5%정도였다.

11) 사교육걱정없는세상(2017.9.28.) 고1대상 학교유형별 사교육비 실태 조사 결과 100만원 이상 사교육비 지출 비율이 과학고/영재학교(37.7%), 광역단위 자사고(35.8%), 전국단위자사고(22.9%), 외고/국제고(16.8%), 일반고(13.7%)로 나타났다.

[표3. 전형별 학교 유형에 따른 합격 현황]¹²⁾

고교 유형	학생부 종합		학생부 교과		논술		실기 (특기자 포함)		수능		전체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일반고	42,846	74.7%	44,468	86.7%	18,119	75.5%	12,092	58.3%	66,110	73.9%	183,635	75.4%
자율고	5,633	9.8%	4,237	8.3%	4,039	16.8%	2,069	10.0%	14,976	16.7%	30,954	12.7%
특목고	5,080	8.9%	364	0.7%	1,571	6.6%	4,252	20.5%	6,303	7.1%	17,570	7.2%
특성화고	3,179	5.5%	1,660	3.2%	28	0.1%	769	3.7%	781	0.9%	6,417	2.6%
기타	625	1.1%	535	1.0%	236	1.0%	1,551	7.5%	1,267	1.4%	4,214	1.7%
합계	57,363	100.0%	51,264	100.0%	23,993	100.0%	20,733	100.0%	89,437	100.0%	242,790	100.0%

한편 더미래연구소는 서울대의 경우 지역균형전형과 기회균형전형을 제외한 학종일반전형에서 자사고 특목고 학생의 비율이 더 높다고 반론한다.¹³⁾ 그러나 이 반론에는 허점이 있다. 지역균형전형 대상 학생들은 다른 대학교의 경우는 학종일반전형에 포함될 학생들이다. 이를 제외하고 비교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이를 포함할 경우 일반고 합격생이 더 많다. 2013학년도에 비해 2018학년도에 자사고/특목고생의 비율이 4% 증가했다고 하지만 이 시기에 자사고의 절대 숫자가 늘어난 점을 감안하면 특이한 점이 아니다.

보다 결정적 반론은 이것이다. 수능 성적 상위 10%의 비율을 비교하면 외고/국제고가 일반고보다 4.2배나 높게 나타난다.¹⁴⁾ 이는 만약 수능 전형이 100%로 확대된다면 외고/국제고 비율이 획기적으로 증가하여 일반고와의 격차는 더욱 커질 것이라는 점이다.

또 하나의 뚜렷한 격차는 강남과 비강남의 격차다. 수능은 재수생에게 훨씬 유리하다. 그런데 재수생 비율은 강남권이 압도적으로 높다.¹⁵⁾ 이로 보건대 수능 전형이 확대될수록 서울권 그 중에서도 강남권 학생의 합격 비율이 훨씬 높아지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

12) 한국대학교육협의회(2017). 앞의 자료.

13) 더미래연구소(2018.3)보고서. 학생과 학부모 등 수요자 중심의 입시제도 개편안을 제안한다.

14)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보도자료(2017.2.10.). 수능모의고사 성적 상위 10% 학생 비율이 외고/국제고는 36.6%로 일반고(8.7%)의 4.2배에 달한다.

15) 조선일보(2015.8.24.). 수능 고3 재학생 대비 재수생 비율이 강남의 경우 83.5%, 서초의 경우 71.3%로 나타나 서울시 평균 49.6%보다 높고, 전국 평균 26.5%보다 월등하게 높다.

다. 반면 학종의 경우 상대적으로 일반고와 지방 학생들에게 더 유리한 전형으로 나타나고 있다.¹⁶⁾

이로 인해 과거에 비해 지방의 일반고 학생들에게는 학종이 기회의 문으로 여겨지는 측면이 있다. 서울대학교는 자체 분석을 통해 정시 전형이 50% 수준으로 늘어나면 강남 합격생이 2배 가량 증가하고 일반고가 급감하며 도농간의 격차는 더욱 커진다고 보고하고 있다.¹⁷⁾

이상을 종합해 볼 때 공정성의 관점에서 지지를 받는 것은 수능 전형이 아니라 학종이 분명하다. 학종이 흙수저 전형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금수저 전형이 아님은 명백하다. 학종을 금수저 전형이라 한다면 수능 전형은 다이아몬드 전형이라 불려야 마땅하다.

○ 공정성 문제에 대한 근원적 해법

이 대목에서 좀 더 근본적인 문제를 짚고 넘어가자. 공정성 프레임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놓치는 것이 있다. 사교육 요인이 얼마나 작용하는가 아닌가를 가지고 대입 제도를 결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일례로 EBS 연계 정책을 들 수 있다. EBS 문제집 연계가 교육의 질을 저하시킨다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사교육비를 줄일 수 있다는 논거로 추진되었다. 실제로 EBS 연계가 사교육을 줄였는지에 대한 의문이지만 그것은 논외로 하고, 교육적으로 문제가 있어도 사교육을 줄인다는 명분으로 정당화되거나 교육적으로 바람직하여도 사교육을 증가시킬 수 있으면 금기시된 것들이 있다. 질 높은 교육과 사교육은 딜레마적인 관계에 있는 경우가 있고, 현실에서는 사교육 프레임이 항상 강력하게 작동하였다. 이는 우리 교육을 하향 평준화시키는 경향으로 작용해 왔다. 이 딜레마를 풀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16) 한국대학교육협의회(2017) 앞의 자료. 서울소재 10개 사립대학 2017학년도 입시 결과 학종의 경우 수도권 이 56.1%, 수능의 경우 70.6%로 수도권이 수능 전형에 유리했다.

17) 국민일보(2018.5.10.). 서울대학교 정시모집 확대(안) 검토 결과 보고서에는 2018학년도 신입생 데이터로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 정시비율을 50%로 높이면 강남 합격생이 2배 가량 증가한다고 한다. 수시 합격 배출한 일반고는 305곳에서 171곳으로 급감한다. 도농 격차도 커진다. 이와 같은 결과는 이전에 중앙일보(2017.3.27.)에서도 보도되었다. 서울대 권오현 전 입학관리본부장은 수시 대 정시 비율을 71대 29로 잡아야 학교 다양성이 높아진다고 했다. 서울대가 정시 대 수시 비율을 5대 5로 시뮬레이션한 결과 상산고, 휘문고 등 수능 성적이 높은 250개 고교의 합격생 수가 느는 반면 일반고 중심의 517개 고교의 합격생 수가 줄어들어 전체적으로 학교 다양성이 줄어든다고 보고하고 있다.

평가 방법을 통해 계층 격차를 완화하겠다는 시도는 애초부터 잘못된 시도다. 어떤 평가도 부유층에게 유리하지 않은 방법은 없거니와 그런 방법을 억지로 고안해내려고 할수록 교육의 질은 하락한다. 사실 수능이나 학종이나 가난한 학생에게 유리하지 않다. 가난한 학생에게 유리한 전형은 기회균형전형밖에 없다.

우리가 참으로 대입에 있어서 계층 격차를 완화하겠다는 목표를 중시한다면 정공법으로 그 문제를 다루어야 한다. 만약 우리 사회가 가난한 학생들에게 더 혜택을 주어야 한다고 합의할 수 있다면 기회균형선발을 더 확대하는 방식을 취해야 옳다. 예컨대 소득균형선발의 개념을 창안할 수 있다.¹⁸⁾

큰 틀에서 소득균형선발과 같은 개념의 선발이 이루어진다면 사교육에 따른 공정성 논란은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이 문제가 해결되면 이제 우리는 대입 전형의 가치를 배움의 질을 높이는 것에 역점을 두고 논쟁할 수가 있게 된다.

4. 배움의 질 문제와 적격자 선발

○ 배움의 질

대입전형을 고려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조건은 학생들의 배움의 질이다. 과연 어떤 전형이 배움의 질을 높일 것인가? 배움의 질을 높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먼저 규명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국어를 배운다고 한다면 국어 교육의 목표인 읽기, 듣기, 쓰기, 말하기 능력이 골고루 다루어져야 한다. 미래 교육을 고민하는 사람들은 프로젝트 수업을 강조한다.¹⁹⁾ 문제를 발견하고, 연구하고, 토론하고, 발표하고,

18) 소득에 따른 합격생 쿼터를 정하는 방식이다. 이를테면 유명 대학의 합격 정원을 소득 상위 10% 계층에 대해서는 10~20%이상을 선발하지 않도록 하고, 소득 하위 10% 계층 학생이 10% 정도 선발되도록 하는 것이다. 국공립대부터 적용하여 사립대로 확대하고 재정 지원을 연계할 수 있다. 이 개념은 매우 대담한 사회적 합의를 필요로 할 것이고, 기술적으로 논의할 점이 많아 여기서는 취지만 제시하고 자세한 논의를 생략한다.

19) 교육부 공식블로그(<https://blog.naver.com/moeblog/221237387890>). OECD 교육 2030 사업이 제시한 역량 교육의 목적과 방향 제시는 새로운 것이라기보다는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핵심 역량 교육의 성과와 한계를 성찰적 분석을 통해 종합한 것입니다. 이를 계기로 핵심 역량을 교육하기 위한 교수학습방법과 평가 방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프로젝트 기반 학습에 대한 연구가 더욱 활발해질 전망입니다. 프로젝트 기반 학습이 핵심 역량 교육과 관련해 새롭게 부각되는 이유는 '학습자의 주도적 참여를 통한 교육과 실제 세계의 연결'을 추구하는 공통점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출처] 외국의 프로젝트 기반 학습을 통한 핵심 역량 교육 사례|작성자 교육부.

협력하며, 무언가를 만들어내거나 변화시키거나 하는 과정에서 학생의 전면적인 측면의 능력이 계발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다양한 능력 가운데서 오지선다형 객관식 문제로 평가될 수 있는 것은 얼마나 될 것인가? 혹자는 객관식 문제라도 잘 만들어진 문제는 고차원적 사고 능력을 평가할 수 있다고 한다. 그 말을 십분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위에서 언급한 다양한 능력을 객관식 문제로 평가할 수 있다고 주장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배움의 질의 측면에서 학종은 뚜렷한 장점이 있다. 학종이 도입되면서 수행평가를 통한 질적 평가가 중요해졌다. 이로 인해 기존의 지필평가의 한계를 벗어나 학생의 다양한 역량을 중시하는 수업과 평가가 조금씩 확대되고 있다. 비교과 영역도 활기를 되찾고 있다.²⁰⁾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점이 있다. 비록 학종의 도입으로 인해 수업의 변화가 나타난 것은 사실이지만 그 변화를 과대 해석해서는 안 된다. 여전히 내신을 결정하는 지필평가의 영향력은 압도적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내신²¹⁾은 결정적으로 몇 가지 문제가 있다.²²⁾ 첫째, 상대평가로 인한 경쟁의 대상이 바로 옆 학우라는 점에서 경쟁의 체감도가 수능보다 훨씬 높다. 둘째, 변별력과 채점 시비 문제로 인해 객관식 문제에 주로 의존하며 대체로 문제의 질이 수능보다 떨어진다. 셋째, 교사별 평가가 아닌 공동출제방식으로 인해 시험 문제의 획일성에 간혀 수업도 획일화 시키는 경향이 있다. 넷째, 학생들에게 3년 내내 입시의 부담을 준다. 다섯째, 1학년 때 못한 학생은 3학년 때 잘해도 만회하기 어렵다. 여섯째, 상대평가 자체가 공정하지 않다. 자신이 속한 집단의 수준에 따라 같은 실력의 학생이라도 다르게 평가받는다. 일곱째, 내신 등급의 유리함을 위해 못 하는 학생들이 잘 하는 학생들의 들러리를 서도록 과목을 선택하게 만드는 비도덕성이 존재한다.

20) 오마이뉴스(2016.10.10.). “학종엔 교실 혁신의 힘이 있어요” (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한 지방 일반계 고등학생들의 변호2) “학종에 학교혁신의 힘이 있다고까지는 선불리 말하지 못하겠지만 교실혁신의 힘이 있다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거든요. 학생부를 잘 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를 고민하는 선생님들이 하나같이 그러시더라고요. 학생부를 잘 쓰려면 '어떻게'라는 방법적 문제만 고민할 게 아니라 '무엇을'이라는 교육활동의 내용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요. 그러면서 교육활동의 내용으로 두 가지를 꼽으시는데, 하나는 <교실수업 개선>, 다른 하나는 <학생자치 강화>였어요.”

21) 내신이라는 용어가 학생부 기록 전체를 의미할 수도 있지만 일반적 용법으로는 지필평가에 의한 시험점수를 의미하고 있어 여기서는 후자의 의미로 사용한다.

22) 김진우(2017). 수능 절대평가와 내신 절대평가 어떻게 할 것인가. 국회의원 조승래·좋은교사운동 정책토론회 자료집.

이 점에서 학종의 개선점이 존재한다. 내신을 교사별 평가로 하고 절대평가로 하지 않으면 지필평가의 질이 개선되거나 과잉변별에 의한 과잉경쟁을 완화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내신성적이 중요한 요소가 되는 학종 또한 그 한계에 갇힐 수밖에 없다. 교과전형은 더 말할 것도 없다. 그래서 학종 대신 학생부교과전형을 더 확대하자는 것은 더욱 문제다. 이는 수능 절대평가와도 연결된다. 만약 수능은 절대평가로 했는데 내신은 그대로 상대평가로 남게 될 경우, 수능보다 더 질 낮은 내신 평가의 영향력이 더 커지게 되고, 이는 학생 입장에서 내신 경쟁이 더 강화되는 결과로 인해 전혀 좋아지는 점이 없게 된다.

조금 있다 대안에서 논하겠지만 이 점에서 학교 지필평가의 기능을 수능의 기능과 통합시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수능의 질을 개선한다는 전제 하에 학교 지필 평가 대신 수능을 통해 평가하도록 하고, 학교의 평가는 지필평가를 폐지하고 대신 일상 수업을 통한 수행능력의 평가에 치중하는 것이 학생들의 배움의 질을 높이는 바람직한 방법이다.

○ 정성평가와 적격자 선발

학생부종합전형의 가장 큰 장점은 대학의 입장에서 적격자 선발이라는 목적에 부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교사가 되고자 하는 학생이 시험 점수만 좋다고 적합한가? 교사로서의 자질이 보이는가 하는 점이 중시되어야 한다. 이 점에서 정성평가를 포함한 학종에 의해 선발된 학생의 중도탈락률이 수능 전형에 비해 낮게 나오는 장점이 설명이 된다.²³⁾ 입학 이후 학점도 학종 전형 출신의 학점이 가장 높게 나오는 점도 비슷한 맥락에서 설명이 된다.²⁴⁾ 그런 점에서 소위 패자부활의 논리를 앞세워 수능 점수만 높으면 상위권 대학 학과에 합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주장은 적격자 선발이라는 목적에 어긋난다. 투명성을 앞세워 타당성을 희생시키는 것이다. 기업에서도 시험 점수만으로 직원을 선발하는 경우는 드물다. 그런데 대입에 있어서만은 정량적 점수로만 선발하는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다. 일정 비율은 정량적점수를 활용하지만 정성평가라는 장점을 배제해서는 곤란할 것이다.

23) 대학교육협의회 앞의 자료에 의하면 주요 54개 대학의 입학생 현황 분석 결과 수능의 중도탈락비율은 4.5%로 가장 높은 반면 학종은 1.5%로 가장 낮다. 서울 10개 대학으로 좁혀보아도 수능의 중도탈락비율은 6.0%인 반면 학종은 2.5%로 나타나고 있다.

24) 대학교육협의회 앞의 자료에 의하면 46개 대학 기준 전별 학업성취도에서 학종이 3.21로 가장 높고, 학생부교과 3.13, 논술 3.14, 수능 3.10으로 나타나고 있다.

5. 과잉 경쟁 문제

○ 과잉 변별에 의한 과잉 경쟁

수능 절대평가는 과잉 경쟁을 완화할 수 있을까? 그 전에 무엇이 과잉경쟁인지를 정의하자. 어떤 경쟁이 과잉 경쟁인지 적정 경쟁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일까? 그것은 학생들의 삶의 질로 판단될 수 있다. 사람마다 기준은 다르겠지만 필자는 고등학생의 적정학습시간은 주당 50시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야 운동도 하고, 친구들과도 놀고, 인간적인 삶이 가능하다. 성인들의 근로시간도 주당 52시간을 넘지 않도록 규정한 것은 나름의 근거가 있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한창 자라나는 학생들에게는 더 많은 여가시간이 주어져야 마땅하다. 그런데 실제 한국의 고등학생의 주당 학습시간은 과로사 기준인 주당 60시간을 넘어 평균 70시간(일반고)~80시간(특목고생)을 넘는다.²⁵⁾ 이와 같은 상태는 학생들의 삶의 질 차원에서 균형을 상실하도록 만드는 것으로 분명 과잉 경쟁이라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과잉 경쟁이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혹자는 과열 경쟁은 교육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말한다. 경쟁은 사회 구조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고용이나 복지의 차원에서 해결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틀린 말이 아니다. 그러나 여기서 좀 더 섬세하게 접근해야 한다. 물론 경쟁의 근본 원인은 사회의 경쟁 구조에서 발생하였고, 교육이 그 경쟁을 반영하는 통로인 것은 맞지만 교육 제도 자체 내에서 경쟁 구조를 더욱 강화한 측면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어떤 면에서는 사회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경쟁마저도 교육 제도가 유발시키는 경우도 있다. 과잉 변별이 과잉 경쟁을 유발한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다. 사회적으로 좋은 일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이 10%라고 생각해보자. 사회는 그 인원을 추리기 위해 대학이라는 관문을 통해 10%의 인원을 선발해달라고 주문했다고 치자. 교육제도는 그 요청을 받아들여 학생들을 한 줄로 줄을 세우기 시작한다. 점수가 나오면서 학생들의 서열은 더욱 세밀해졌다.²⁶⁾ 10%가 아니라

25)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0). 2009 한국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26) 유발 하라리는 『호모데우스』(2017, 김영사)에서 이와 관련하여 점수가 학교교육을 지배하는 과정을 아래와 같이 서술한다. “관료들이 사람을 평가할 때는 그들이 선택하는 척도가 중요한 차이를 만들어낸다. 교육기관이 엄밀한 평점을 매겨 사람들을 평가하기 시작했을 때, 수백만 학생과 교사의 삶이 극적으로 바뀌었다. 평점은 비교적 새로운 발명품이다. 세익스피어 시대의 대학생은 옥스퍼드 대학교를 떠날 때 학위를 받거나 받지 못하거나 둘 중 하나였다. 최종 평점으로 누구는 74점을 주고 누구는 88점을 준다는 생각을 아

0.1%까지 구분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리고 학생들이 선호하는 대학들의 서열도 성적 순대로 자연스럽게 만들어지게 되었다. 이렇게 만들어진 대학의 서열은 또 다시 학생들의 서열을 요구하게 되었다. 이제는 10%가 아니라 1%, 0.1%의 구분을 요구하게 되었다. 그 결과 학생들의 경쟁은 10% 안에 들기 위한 경쟁을 넘어서 1% 안에 들기 위한 경쟁으로 심화되었다. 그것도 상대적 경쟁이기 때문에 무한경쟁으로 비화된다. 턱걸이를 10개만 해도 훌륭했는데 이제 100개를 해도 옆 친구가 101개를 하면 102개를 하기 위한 경쟁으로 과잉 경쟁이 발생하는 것이다. 턱걸이 대신 수학을 넣어보면 더 실감이 갈 것이다. 수능 수학 30번은 정답률이 2% 미만이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아마도 고등학교 기간 동안 약 3,000시간의 공부를 해야 할 것이다.²⁷⁾ 3,000시간은 3년간 학교에서 보내는 정규교육과정에 맞먹는 시간이다. 이미 충분히 잘 하는 학생들을 더 세밀히 변별하기 위해 문제는 더욱 꼬이게 되고 불필요한 과잉 경쟁을 유발하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평가제도가 경쟁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대입 전형을 다르게 설계한다면 불필요한 과잉 경쟁을 완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것은 곧 과잉 변별을 버리는 것이다. 일정한 절대 수준에 도달하면 동급으로 취급하면 된다. 그 절대 수준은 학생들의 적정학습시간에 기초해서 설정되어야 한다. 만약 학생이 학교수업시간에 충실하게 참여하고 주어진 과제를 성실히 수행한다면 주당 50시간의 학습시간 정도면 도달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설정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면 따라오는 질문은 그 절대 수준에 도달한 학생들이 많다면 어떻게 변별하여 선발할 것인가의 문제다. 이 지점의 고민은 대학이 해야 한다. 더 이상 점수로 변별할 것이 아니라 학생의 특성에 대한 섬세한 관찰을 통해서 선발하면 된다. 학생들의 관심과 장점은 다양하다. 한 줄이 아니라 여러 줄로 세울 수 있다. 그 중에서 대학의 학과의 특성에 맞는 학생을 고르면 된다. 그것이 어렵다고 하여 수능이나 내신을 통해 한 줄 세우기를 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학생들을 무한경쟁으로 몰아넣는 행위다.

무도 하지 못했다. 정기적으로 엄밀한 평점을 매기기 시작한 것은 산업시대의 대중 교육제도이다. 공장과 정부 부처가 숫자 언어로 사고하는 데 익숙해지자 학교가 그 뒤를 따랐다. 초기 학교는 학생의 계몽과 교육에 중점을 두는 곳이었고, 점수는 그저 성공을 측정하는 하나의 수단에 불과했다. 하지만 학교들은 곧 높은 점수를 받는 일에 중점을 두기 시작했다.(236쪽)

27) 학생들은 대체로 수학에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입하고 있고, 주당 20시간 정도를 수학에 투입한다고 가정하면 연간 1,000시간, 3년 동안 3,000시간이 소요된다. 정규교육시간은 주당 35시간*34주*3년=3570시간이다.

혹자는 그렇게 될 경우 경쟁의 압력이 수능이나 내신 점수가 아닌 면접의 영역으로 옮겨가며 풍선효과에 의해 면접의 영역에서 과잉 경쟁이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면접을 통한 정성평가의 경우 학생의 다양한 측면에 대한 평가이기 때문에 여러 줄의 경쟁으로 분산된다. 예를 들어 어떤 학생은 물리에 관심이 많을 수 있고, 어떤 학생은 호기심이 많을 수 있고, 어떤 학생은 봉사심이 투철할 수 있으며, 어떤 학생은 동아리 활동을 열심히 했을 수 있다. 어떤 학과에서 어떤 학생을 더 적합하다고 판단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대학마다 기준이 다르다. 한 줄의 경쟁보다 여러 줄의 경쟁의 압력이 더 완화된다는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단 대학이 면접을 본고사형 시험과 같은 형태로 운영한다면 이는 새로운 과잉 경쟁을 낳을 수 있다. 그러므로 이미 있는 자료를 가지고 질적으로 판단하는 과정으로 삼는 것이 적절하다. 면접도 그것을 확인하는 수준에 그쳐야 한다. 그렇게 하면 전공 적합도를 보다 중시할 수 있게 되고, 사교육 개입 요인은 줄어들 것이고, 개인의 희망이나 특성이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보다 근본적이고 혁신적인 방법은 추첨이다.²⁸⁾ 일정한 범위 내에 드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추첨으로 뽑는다면 경쟁의 압력은 확실히 줄어들 것이다. 추첨은 합리적이다. 어차피 자격이 동등하다면 추첨으로 뽑아도 별 문제가 없다. 변별에 들어가는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다. 문제는 추첨이라는 방식이 사회적으로 수용이 될 것인가의 문제다. 추첨은 요행이라는 인식이 있고, 추첨에 의해 당락이 갈린 결과를 패자의 입장에서 수용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롤스의 무지의 베일을 가정한다면 우리 모두가 동등한 조건이므로 추첨을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절대평가는 과잉 경쟁을 완화할 수 있다. 이것은 수능에만 적용되어서는 안 되고 내신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수능만 절대평가를 하고 내신은 상대평가로 남아 있다면 경쟁 완화의 효과는 사라지거나 더 악화된다.

○ 고교 체제의 문제

내신 절대평가와 관련하여 하나의 장애물이 있다. 내신 절대평가를 하면 특목고가 유

28) 강태중(2015.2.27.) 학교교육과 평가, 그 미래방향을 모색한다. 교육을 바꾸는 사람들 토론회 자료집. 강태중은 추첨은 커트라인 주변에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적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측정이 자체적으로 지니는 한계나 모호함이 있는데, 커트라인의 인위성에 근거하여 사실상 비슷한 학생의 당락이 결정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이유다. 즉 동등한 추첨권을 부여하고 추첨의 기회를 주는 것이 지금보다는 더욱 타당한 선발법이라는 것이다.

리해진다는 것이다. 일반고나 지방에 유리한 것이 상대평가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야말로 소탐대실이다. 특목고 학생에 불이익을 주기 위해 전체학교 학생에 대해 상대평가라는 더 큰 악을 용인하는 것이다. 특목고생은 원래 성적이 우수한 학생이다. 이 학생들을 특정 학교에 모으도록 하는 것은 허용해주면서 대입시에서는 불이익을 주겠다는 것은 모순적이다. 특목고 문제는 근본적으로 고교 체제를 개편함으로써 해결하여야 한다. 혹은 유명대학에 대해 특목고생 선발 비율에 가이드라인을 주면 된다. 이 문제는 특목고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다. 성적순 선발을 실시하는 모든 학교에 해당한다. 사실상이 문제는 대입제도와도 관련이 되어 있지만 근본적으로 고교교육을 어떻게 디자인할 것인가 하는 관점에서 접근하여야 한다. 고교체제에 대한 논의가 맞물려야 할 이유다.

6. 학생부 기록의 문제

○ 과열, 과장, 업무 과중의 문제

학종의 강화로 인해 학생부 기록을 둘러싼 과열과 과장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을 어떻게 볼 것인가? 물론 학생 차원에서 관리해야 하는 스펙이 많아지는 부담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 교사 차원의 기록의 진실성에 대한 문제도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것이 치명적인 문제인지는 좀 더 생각해보아야 한다.

과열의 문제는 첫째, 침소봉대된 측면이 있다. 예를 들면 어떤 학교 학생들은 자율동아리를 5개씩이나 한다고 한다.²⁹⁾ 그런데 전체 학교 중에서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그러할까? 극소수의 극성인 학교에서 발생하는 현상을 지나치게 확대 해석한 측면이 있다. 아직은 전체 학교 측면에서 볼 때 자율동아리는 더 활성화되어야 할 영역이지 억제해야 할 것이 아니다. 둘째, 만약 과열되었다 해도 자율 동아리 활동을 많이 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 원래 국영수 위주의 공부가 과열 상태다. 그 중에서 일부 시간을 할애하여 스포츠클럽도 하고 동아리 활동을 하는 것은 학생의 다양한 배움의 과정으로 장려되어야 할 것이지 문제는 아니다. 물론 학생 입장에서는 공부도 해야 하고 동아리 활동도 해야 하는 것이 부담으로 다가올 수는 있다. 그러나 부담이 원래 없다가

29) 동아일보(2016.7.15.). 일반고 자율동아리 활동 참여 비율이 52.8%로 나타났다. 과학영재학교의 경우 평균 287.4%로 학생 1명당 3개 가량의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었다. 서울지역 외국어고의 경우 평균 120%였다.

생긴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부담의 총량 가운데서 부담의 종류가 달라진 것이다. 셋째, 과열 현상은 점차로 진정될 것이다. 왜냐하면 동아리를 많이 한다고 해서 좋은 평가를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³⁰⁾ 학생 차원에서도 교과 공부보다 동아리 활동을 많이 하는 것은 입시에서 더 유리하지 않다. 여전히 교과 점수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다만 비 교과 활동에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여지를 많이 주는 효과가 있다.

학종 초기에 비해서 사교육 유발 요인이 큰 부분에 대해서는 점차로 줄여가고 있다. 외부 대회 수상은 반영하지 않고, 교내 대회 수상도 축소할 예정이다. 자율동아리라든지, 자소서 같은 항목은 실제로 사교육 유발 요인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사교육을 줄이는 측면만 강조하면 교육적으로 의미가 있는 활동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 학생부 기재 항목은 다양한 측면의 정보의 필요성과 학생들의 과중한 부담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나갈 문제다.

교사 입장에서 과장 혹은 허위의 문제는 어떤가? 우선 과장과 허위 기록은 구분될 필요가 있다. 만약에라도 학부모의 청탁을 받고 허위 조작을 했다면 처벌받아야 한다. 그런데 교사는 그렇게 할 동기가 없다. 김영란법으로 커피 한 잔도 못 받게 되어 있는 상황에서 굳이 교사가 위험을 무릅쓰고 허위 기록할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게다가 학종은 수십 명의 교사에 의한 다단계 평가의 총합이다. 한 두 명의 교사로 인해 전체적 기록이 뒤바뀔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또한 학생부 기록은 사실 위주로 기록하도록 대학의 입학사정관들은 요구한다. 미사여구를 기록했다고 해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한다고 한다. 물론 자기 학교 학생에 대해서 팔이 안으로 굽는 심정으로 이왕이면 좋은 표현으로 기록하는 경우는 있다. 그러나 이는 사회 통념상 용인되는 수준으로 보아야 한다. 입사 원서를 쓸 때 자기 소개서에 그야말로 있는 그대로 단점을 기록하는 경우는 드물다. 같은 사실이라도 좋은 쪽으로 기술한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는 허위로 보지 않는다. 회사에서도 그 점을 감안해서 평가한다.

○ 친절한 성적표

30) 베리타스알파(2018.2.20.). 전문가들은 학종이 얼마나 많이 했는가에 주목하는 정량평가가 아닌 정성평가라는 점을 강조한다. 지난해 서울대가 공개한 '2018학년 학생부종합전형 안내'에서도 동아리개수보다는 동아리 활동을 통해 학생이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성장했는지를 주요 평가요소로 둔다고 밝히고 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교과별 세부특기사항 부분이다. 교사로서도 기록의 부담이 크고 학생들 간의 편차도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록의 간소화와 신뢰성 높은 기록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좋은교사운동에서 제안한 친절한 성적표가 그 대안이다.³¹⁾ 교과별 세부 능력을 카테고리화하여 성취수준을 표기하게 하고 그것으로 다 표현하기 어려운 부분을 서술하도록 하는 방법이다. 교사 입장에서도 기록을 간소화하는 효과가 있고, 대학 입장에서도 의미 있는 기록이 풍부해진다. 또한 이는 지필평가보다는 수행평가를 통해서 발견되어질 역량이기 때문에 수업과 평가 혁신을 견인하는 효과도 가져올 수 있다.

[표4. 친절한 성적표 양식]

과목	평가영역(코드)	평가 방법	성취도		세부특기사항
			1차	2차	
도덕	개념 이해(01)	학습지/지필고사	C	B	학기 초 수업에 대한 흥미가 약했으나 후반부로 갈수록 적극적인 태도로 수업에 참여하고 보고서 작성과 발표 능력이 많은 향상을 보임. 창의적 질문을 많이 제기함. 사회 현상을 윤리적으로 분석하는 관점이 탁월함.
	논리적 사고력(02)	보고서 작성	C	B	
	지적 호기심(03)	학습지(질문란)	C	A	
	경청(04)	학습지/태도 관찰	C	A	
	작문력(05)	보고서 작성	C	B	
	발표력(06)	발표	C	B	
	윤리적 사고력(07)	보고서 작성	C	A	

이 외에 대학의 평가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투명한 부분에 대해서는 외부자를 참관인으로 포함시키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다.

7. 종합적 대안

○ 기본적 지향

이제 새로운 대입제도가 나아갈 방향을 이야기하자.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대입제도에

31) 김진우(2013). 기로의 성취평가제 어디로 갈 것인가. 좋은교사운동 정책토론회 자료집.

대한 요구는 서로 상충되는 측면이 있다. 이를 조정함에 있어 어떤 가치를 우선할 것인가 하는 고려가 필요하다. 가장 우선되어야 할 것은 학생들의 삶이다. 학생들이 배움의 기쁨을 누리고 삶의 균형을 회복하는 것이 우선적 가치가 되어야 한다. 사회적 공정성의 가치도 중시되어야 한다.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배움의 질이 중심에 있어야 한다. 오지선다형 객관식 문제로 평가될 수 있는 배움은 매우 협소하다. 배움의 영역은 훨씬 더 다양하다. 다양한 배움이 가능할 수 있도록 대입제도는 그것을 촉진하여야 한다.

둘째, 과잉 경쟁을 지양해야 한다. 경쟁은 불가피하지만 상대평가와 같은 제도의 문제에서 비롯된 과잉 변별과 과잉 경쟁은 억제되어야 한다.

셋째, 수업이 살아야 한다. 교사의 자율적 전문적 기획력이 극대화될 수 있어야 하고, 소수가 아닌 다수가 참여할 수 있는 수업이 되도록 한다. 대입제도는 그러한 수업을 방해하는 방향으로 작용해서는 안 된다.

넷째, 사회적 공정성을 제고해야 한다. 가난한 학생이라도 불리하지 않는 전형을 지향해야 한다. 완전히 불리함을 제거하는 어렵지만 상대적으로 그 격차를 최소화하는 전형에 대한 설계가 필요하고 전형의 방법을 넘어서 사회구조적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

다섯째, 대학의 자율성을 존중해야 한다. 학교 교육을 보호하는 선에서, 과잉 경쟁을 촉발하지 않는 선에서, 사회적 공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선에서 적격자 선발을 위한 대학의 자율성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

○ 종합적 대안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보면 현재의 수능 시험이 학생들의 배움의 질을 제고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사회적 공정성에도 기여하지 못한다는 것은 분명하다. 다만 유일한 장점은 단순성과 객관성이다. 그러나 현실은 그 단순성과 객관성에 대한 선호로 인해 수능 전형을 확대하라는 요구는 대중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과연 대중이 학종의 긍정적 효과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수능의 실체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는지는 의

구심이 있지만 이와 같은 대중적 요구를 간단히 무시해버리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제 이 문제는 공론 조사라는 과정에 내맡겨져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현재 주어진 선택지 안에서 선택하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임시방편에 불과하고 그것도 매우 잘못된 선택으로 오도되기 쉬운 상황이다. 고로 이 시점에서 우리는 새로운 해답이 필요하다. 현재의 조건에서 딜레마에 빠질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방향성을 정립하고 그것에 기초하여 단기 대책을 세워야 한다. 대입제도의 종합적인 그림을 어떻게 그려야 할 것인가?

첫째, 수능의 질 개선이 급선무다. 현재와 같은 수능 시험을 두고 선택을 강요하는 것은 모두에게 모두에게 만족스럽지 않다. 수능의 질 개선에 대한 로드맵이 명확하게 나와야 한다. 논술형 수능을 도입해야 한다. 오래 전부터 대입제도에 대한 여러 연구에서 논술형 수능의 도입의 필요성이 주장되었지만 그 때마다 중장기 과제로 미뤄졌다.³²⁾ 2018년에도 2022년의 대입에도 도입이 불가하다고 하며 역시 중장기 과제로 분류되고 있다. 그 중장기란 언제 오는 것인가? 이제 더 미루어서는 안 된다. 논술형 수능의 도입 시기를 언제로 할 것인지 결정이 되면 그에 맞추어 대책이 마련될 것이다.

둘째, 수능과 내신의 절대평가를 동시에 시행해야 한다. 절대평가는 등급제로 시행하도록 하고 1등급의 기준은 과잉 경쟁을 유발하지 않도록 학교교육을 충실히 이수한 학생이라면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사실상 상대평가를 하더라도 1등급을 4%가 아닌 10%~20%정도가 될 수 있도록 한다면 훨씬 경쟁이 완화될 수 있다. 과잉경쟁의 문제는 1,2등급 내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셋째, 논술형 수능과 수능 내신 절대평가라는 전제 조건이 충족된 가운데 수능 점수와 학생부의 정성평가를 결합한 ‘수능종합전형’³³⁾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수능종합전형은 외부평가의 장점과 내부 평가의 장점이 결합된 것이다. 수능의 단점은 제거되고 절차적 공정성과 신뢰성이라는 장점이 남는다. 여기에 지필평가로 평가될 수 없는 부분을 보완하는 수행평가 위주의 내부평가가 결합이 되면 학생에 대한 종합적인 능력

32) 김지하 외(2017). 미래지향적 대입제도 개선방안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33) 수능종합전형은 학생부종합전형과 비교될 수 있다. 학생부종합전형이 내신점수와 정성평가의 결합이듯이 수능종합전형은 수능점수와 정성평가의 결합이다. 그 비중이 내신과 수능 중에서 어떤 것이 높느냐에 따라 정의될 수 있다.

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다. 여전히 학생부만으로 평가하는 학생부종합전형은 존재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왕이면 수능점수까지 포함되는 전형이 대학들로서는 더 신뢰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대학이 선택할 몫이다. 수능 점수와 학생부의 반영 비율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단 학교교육의 과정을 존중한다는 의미로 학생부의 의무 반영 비율을 적절하게 설정해야 할 것이다. 학교밖 청소년들을 위한 전형으로는 학생부를 제외한 수능점수와 면접으로만 선발하는 전형을 적용할 수 있다. 이 외에 특기자 전형은 현행처럼 유지될 수 있다. 다만 논술 전형의 경우 새로운 수능과 수행평가를 통해 그 기능을 흡수한다고 보고 폐지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넷째, 이른바 수능Ⅱ 개념을 도입할 수 있다. 수능 과목은 학생이 선택한 과목을 치를 수 있도록 제공되어야 한다. 반드시 한 날에 치르는 방식이 될 필요는 없다. 정기적 외부평가 체제를 마련해두고 준비된 학생부터 응시할 수 있다. 외부평가라 하여 획일적이 될 필요는 없다. 학교의 교육과정을 존중하는 형태의 외부평가 방식도 얼마든지 가능하다.³⁴⁾ 이렇게 되면 학교 지필평가의 기능은 자연스럽게 수능으로 흡수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학교의 정기고사는 폐지하고 수행평가 위주의 상시 평가만 남길 수 있다. 이렇게 되면 학생들 입장에서는 너무 자주 치르는 정기고사의 부담으로부터 벗어나고 최종 평가가 존재하기 때문에 길게 보고 준비하게 된다. 모의고사 형태의 지필평가를 치르겠지만 그것은 형성평가의 기능으로 작용하므로 부담이 없다. 교사는 정기고사 출제와 관리에 따르는 업무로부터 벗어난다. 대신 학생에 대한 개별적 관찰과 상시 평가라는 교육 본질에 맞는 평가를 하게 된다.

다섯째, 교사의 수업 기획력 향상을 위해 교사별 평가를 도입하는 한편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 수행평가의 기준을 성취기준에 맞게 정립하고 교사의 평가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교원단체가 주도하여 (가칭)평가지원센터를 운영하여 평가의 질을 검증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여섯째, 특정 학교에 대한 우대 문제가 대입 제도와 내신 제도를 교란하지 않도록 구조적으로 고교체제를 개편해야 한다.

34) IB의 외부평가의 경우 문학 과목의 경우 자신이 읽은 책 중에서 선택하여 서술하도록 하는 문항을 제시함으로써 학교교육과정을 존중하는 형태로 평가를 시행한다.

일곱째, 사회적 공정성 강화를 위하여 기회균형선발의 폭을 확대하여야 한다.

간단히 요약하면 수능의 질을 개선하고 수능과 내신의 절대평가를 시행하면서 기존 내신의 지필평가 부분은 수능으로 흡수하고, 내신은 교사별 평가 체제 하에서 수행평가 중심으로 재편한다. 이에 기초하여 수능 위주의 수능종합전형과 학생부 위주의 학생부 종합전형을 중심으로 운영하자는 것이다.

8. 단기 대책

위에서 제시한 방안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논술형 수능과 수능 내신 동시 절대평가의 도입이다. 이를 어느 시점에 적용할 것인지를 정하고 나면 나머지 부분의 그림이 맞추어질 수 있을 것이다. 그 시점은 빠르면 2022년부터 적용될 수 있다. 논술의 수준과 범위는 점진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겠지만 3년 정도면 학교가 준비할 수 있을 것이다. 늦더라도 2025년부터는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가능하면 빨리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 때까지는 현행 제도를 유지하면서 부분적으로 고치는 것이 적절하다. 정시를 확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수시와 정시의 비율은 인위적으로 조정할 것이 아니라 대학 자율에 맡겨야 한다. 수시와 정시 시기도 그대로 두는 것이 낫다. 수시와 정시가 통합되면 수능의 비중이 늘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수능 과목도 당분간 그대로 유지하도록 한다.

단기적으로 공론화위원회나 교육부는 무엇을 결정해야 할 것인가? 수능의 절대평가 범위를 논의하여야 한다. 상대평가를 당분간 유지하더라도 영어 절대평가에 이어 수학도 절대평가로 우선 적용하는 것이 수학의 과잉 팽창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필요하다. 수능과 내신은 당분간 상대평가를 유지하더라도 등급의 범위를 넓혀야 한다. 1등급의 비율을 10% 수준으로 확대하면 상대평가 체제 하에서라도 과잉변별에 의한 과잉경쟁을 완화할 수 있다. 상대평가 등급 체제를 조정하여 각 등급을 10%정도로 설정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다. 수능의 최저등급 반영은 현재보다 완화할 필요가 있다. 수능 EBS 연계는 폐지해야 한다. 수능 전형에서 표준점수보다는 원점수를 적용하는 것이 낫다.³⁵⁾

35) 표준점수와 원점수는 사실상 세밀한 변별이라는 면에서는 동일하지만 표준점수 방식이 더 세밀하게 변별하는 한편 수학에 가중치를 부여하는 효과가 발생한다. 그리고 원점수는 어떤 면에서 점수제 절대평가라고 할 수도 있다.

수능 전형에서 등급을 사용한다면 동점자에 대해서 원점수 적용보다는 면접을 결합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학생부의 경우 부분적인 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 친절한 성적표 체제는 2022년부터 도입이 가능하다. 과열과 과장의 문제와 교사의 기록 부담이 과중한 부분에 대해서는 손을 볼 필요가 있으나 학생의 다양한 활동을 위축시키지 않도록 균형을 맞추어야 한다.

9. 무엇을 공론화해야 할 것인가?

현재의 공론화 방식은 무엇이 문제인가? 첫째, 의제 설정이 잘못되었다. 해결되어야 할 문제를 논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현재 조건에서 정답을 찾으라고 하니 제대로 된 결론을 낼 수 없다. 둘째, 국민공론패널이 관련 사안을 제대로 이해하고 토론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그럴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고 하기 어렵다. 셋째, 패널의 구성 측면에서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대변하지 못하고 있다. 학생과 학부모와 교사를 교육의 3주체라고 하면서 정작 중요한 대입 문제를 결정함에 있어 이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지 않다.

기본적으로 교육 정책을 여론조사 방식으로 결정할 수 있는가 하는 근본적 문제 제기도 있다. 원전 문제와 다르다는 지적도 있다. 누가 결정해야 하는가? 원론적으로 말하면 국민들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여 정책당국이 국정 철학을 반영하여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러나 현재의 상황은 그 과정이 충분히 작동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갈등조정에 필요한 신뢰를 획득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다. 특히나 이해관계가 첨예한 대입제도를 두고는 기존의 정책결정방식이 국민들의 공감대를 얻거나 설득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인식이 존재한다. 어떤 정책이든 국민의 뜻을 반영해야 한다는 대전제는 분명하다. 그 방식이 간접적이어야 하는지 직접적이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사안마다 다르다. 필자의 기본입장은 가능하면 직접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다만 비용의 문제나 전문성의 문제가 있는데 이를 극복할 수 있다면 직접 민주주의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소수의 전문가가 전문성이라는 미명 하에 그들만의 인식 틀에 갇히거나 이해집단의 이익을 반영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국민들이 충분히 문제를 이해할 수 있는 조건만 갖추어진다면 소수의 의견보다는 다수의

의견이 보다 해답에 가까워질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결정되어진 정책은 정당성을 확보하면서 안정성을 가질 수 있다. 지금까지 교육정책의 문제가 정권마다 달라진다는 점이었는데 만약 국민적 공감대 위에서 어떤 결정이 이루어진다면 그러한 문제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공론화해야 할 것인가?

첫째, 의제를 제대로 설정해야 한다. 앞서 말한 대입제도 종합적 대안의 각 부분을 논의해야 한다. 가장 핵심적인 사안은 논술형 수능과 수능과 내신의 절대평가 도입 여부다. 이 논의는 대입 제도의 기본 조건을 결정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수능과 내신과 면접을 어떻게 결합할 것인가 하는 그림이 나오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기존의 대입 구도를 뛰어넘는 새로운 합의가 가능할 수 있다. 연결되어 있는 주제로 고교체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 나아가서 사회적 공정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 필요하다.

둘째, 위에서 언급한 의제를 두고 논의를 하기 위해서는 절대 시간이 보다 많이 필요하다. 시간보다 중요한 것은 질 높은 의사결정이 될 수 있도록 토론의 과정을 치밀하게 계획하여 전문가와 대중이 함께 참여하고 이해의 수준을 높여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셋째, 공론화 패널을 구성함에 있어 학생(청년)과 학부모와 교사의 비중을 각각 1/3로 하는 것을 제안한다. 학생(청년)은 고등학생부터 30세까지 포함하도록 하고, 학부모는 15세 이하 자녀를 둔 학부모로 하고, 교사도 초중고 교사를 골고루 포함하도록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교실의 목소리를 좀 더 현장감 있게 담아내는 동시에 균형감 있는 의견을 모아낼 수 있을 것이다.

10. 결론

아버지와 아들이 당나귀를 팔러 가고 있었다. 나귀를 끌고 가는데 그것을 본 사람이 당나귀를 타고 가지 않는다고 비웃었다.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을 태우고 갔다. 또 다른 사람이 아들을 불효자라고 손가락질 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아들이 걷고 아버지가 타고

갔다. 또 다른 사람이 아이를 고생시킨다고 손가락질 했다. 그래서 이번에는 둘 다 탔다. 또 다른 사람이 당나귀가 불쌍하다고 했다. 그래서 아예 당나귀를 묶어서 아버지와 아들이 어깨에 메고 걸었다. 당나귀는 몸부림을 치다 강에 빠져 죽고 말았다.

어떤 대입제도든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근원적으로 대입 경쟁이 있고 어떤 제도를 도입하건 이를 둘러싼 불공정 논란과 부작용은 존재하기 마련이다. 그 가운데서도 어떤 대입제도가 교육의 본질을 구현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지를 선택해야 한다.

대입제도는 많은 개편을 거듭했지만 큰 맥락에서 보면 하나의 방향성을 가지고 변화되어 왔다. 시험 점수에 의한 선발이 가져오는 폐해를 극복하고 학교교육을 중시해야 한다는 방향이었다. 그것도 상대평가에 의한 점수가 아니라 학생의 다양한 측면의 장점을 중시하자는 것이 학생부종합전형이라는 형태로 구현되었다. 그렇게 하니 당연히 과거의 수능 점수에 의한 객관적 변별이 약화될 수밖에 없고 다시 과거로 돌아가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되었다. 그러나 여기서 다시 과거의 수능 체제를 강화하는 것은 팔려가는 당나귀 꼴이 되는 것이다.

우리는 두 개의 상반된 패러다임 중에서 선택을 해야 한다. 하나는 과거 패러다임이고 다른 하나는 미래 패러다임이다. 과거 패러다임은 변별력 중심 패러다임으로 세밀한 줄 세우기를 위해 객관적 변별력을 강화하는 대신 배움의 질을 하락시키고 과잉 경쟁을 유발하는 방식이다. 미래 패러다임은 타당성 중심 패러다임으로 배움의 질을 높이고 모두의 성장을 위해 과잉경쟁을 완화하는 대신 객관적 변별력을 다소 양보하는 방식이다. 과거를 선택할 것인가? 미래를 선택할 것인가? 이제 그 선택이 우리 앞에 있다.

11. FAQ

- 논술형 수능이 사교육을 유발하지 않겠는가? 학교는 준비가 되었나?
 - 지금의 대학별 논술고사는 학교에서 준비하기 어렵다. 어떤 논술인가가 중요하다. 학교교육으로 충분히 준비가 가능한 논술 문제를 출제할 수 있다. 이미 학교는 수행평가에서 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논술 문제에 익숙하다. 그리고 논술형 수능이 된다면 기존 수업의 형태가 많이 바뀔 것이다. 기본 수업에서 논술

을 준비한다면 별도의 부담이 되지 않을 것이다.

- 논술형 수능을 하게 되면 채점의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는가? 비용이 증가하지 않는가?
 - 논술형이라도 복수에 의한 다단계 채점 방식을 통해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 비용은 증가하겠지만 중국도 900만 명을 대상으로 논술 시험을 시행한다. 비용은 교육의 질을 위해 투자할 가치가 있다.

- 수능 전형의 장점으로 패자부활이 언급된다. 절대평가를 하면 패자부활이 어려워지지 않는가?
 - 절대평가를 해도 수능 점수가 우수하면 패자부활이 가능하다. 1등급의 경우 동점자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를 면접으로 선발할 수 있다. 100% 점수만 반영하라고 하는 것은 대학 학과의 입장에서 적격자 선발에 부합하지 않는다. 수능의 비중을 높이되 일정 비율을 면접으로 하는 것은 수능에 의한 패자부활을 보장할 수 있다.

- 수능종합전형의 경우 내신 지필평가는 제외되는가?
 - 수능의 질이 좋아지고 절대평가가 되면서 내신 정성평가와 결합되는 수능종합전형이 도입되면 내신 지필평가는 실시할 수도 있지만 자연스럽게 지필평가의 기능을 수능이 흡수함으로써 사라질 수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학교에서 치르는 지필평가를 둘러싼 업무 부담이 줄고 수행평가 위주의 상시평가 체제가 강조될 것이다.

■ 참고문헌

- 강기수(2017). 학생부전형의 성과와 고교현장의 변화.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심포지엄 자료집.
- 강원일보(2018.4.26.). 수능절대평가 찬반 기자회견 보도.
- 강태중(2017). 학교교육과 평가, 그 미래방향을 모색한다. 교육을바꾸는사람들토론회자료집.
- 교육부 공식블로그(2018). 외국의 프로젝트 기반 학습을 통한 핵심역량 교육 사례. blog.naver.com/moeblog/221237387890.
- 국민일보(2018.5.10.). 서울소재 10개 사립대학 입시 결과 보도.
- 김지하 외(2017). 미래지향적 대입제도 개선방안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김진우(2013). 기로의 성취평가제 어디로 갈 것인가. 좋은교사운동 정책토론회 자료집.
- 김진우(2017). 수능 절대평가와 내신 절대평가 어떻게 할 것인가. 국회의원 조승래-좋은교사운동 정책토론회 자료집.
- 더미래연구소(2018). 학생과 학부모 등 수요자 중심의 입시제도 개편안을 제안한다. 보고서.
- 동아일보(2016.7.15.) 자율동아리 참여율 보도.
- 베리타스알파(2018.2.20.). 학종반영요소 보도.
- 사교육걱정없는세상(2017.9.28.). 사교육실태 보도자료.
- 사교육걱정없는세상(2017.2.10.). 대입제도 보도자료.
- 송기석·한국교육행정학회(2017). 대입제도의 문제점과 해법 탐색. 교육정책포럼 자료집.
- 오마이뉴스(2016.10.10.). 학종엔 교실 혁신의 힘이 있어요.
- 유발하라리(2017). 『호모데우스』. 김영사.
- 조선일보(2015.8.24.) 재수생 비율 보도.
- 한국대학교육협의회(2017). 학생부전형의 성과와 고교 현장의 변화. 심포지엄 자료집.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0). 2009 한국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연구.